2월국회 '빈손'되나…쟁점법안 무더기 이월될 듯

여야 합의 김영란법·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난망

亞문화전당특별법-경제활성화법 막판 '빅딜' 가능성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빈손' 2월 임시국회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회기 종료일을 불과 닷새, 업무일 기준으로는 사흘밖에 남기지 않은 26일 현재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삐라(전단) 살포 저지 결의안, 생활임금제 만드는 최저임금법, 여권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등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야당이 과거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에 박 후보자가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식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인과 사립 교육기관 교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무위 수정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나섰지만,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김영란법 원안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틀 전 원내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만큼, 찬반이 팽팽한 김영란법 심의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게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역시 야당의 반대로 이번 회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절대 불가'로 지목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4~5개 경제활성화법안은 여권에서도 내부적으로 필수 통과 법안으로 지정한 것이어서 여야 양측 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대부분을 처리해 주고 11개만 남았는데 우리 당은 의료영리화 관련법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부분을 빼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관광진흥법은 호텔 수요 상태를 점검하게 4월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야당이 그동안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일각에서는 빅딜을 통한 극적인 협상 타결 전망도 나오고 있어 하루 이틀 사이 여야의 물밑 협상이 2월 임시국회 성적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열창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오른쪽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합뉴스

野, '국정원 盧수사 언론플레이' 진상조사 하겠다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 "사안 중대…상임위 소집" 공세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26일 국가정보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을 과장·왜곡해 언론에 제공했다는 폭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이 검찰 수사내용을 언론에 제공, 왜곡해 여론을 호도했다면 국가적인 중대 범죄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주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악의적인 '수사조작원'이었다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는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5공보다 노골적인 국정원 행태는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원장의 독단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을 시늉이라도 내려면 이 전 중수부장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침묵을 깨고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조사,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새 지도부인 여당도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해 관련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 "이 사건은 결국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거들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천호선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전 중수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고, 여론을 동원하기 위해 권력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기밀을, 그것도 허위로 조작해 누설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 전 대통령의 종복 원전 원장의 지휘 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이 전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며 "때문에 원 전 전원장과 수시로 독대했다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거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당시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것은 국정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제정책 실패 朴정부 2년 세월호 침몰 7시간과 같다"

장병완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증세·복지 논쟁을 이어갔다.

장병완(광주 남구·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의 5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며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 처방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 2년은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 못한 세월호 7시간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 확립, 재정운용 정상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위기돌파를 위해 '남북경협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가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5·24 조치 해제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5·24 조치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완구 총리가 직접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국정과제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는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냐"며 "경제를 불쌍하게 만들어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외쳐가며 지출을 늘렸지만, 이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기준, 의원·변호사 겸직 4억대 연봉…국민감정 반해"

황주홍 의원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6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억대 소득을 누리며 변호사와 국회의원을 겸직해 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는 작년 3월까지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겸직하며 2013년에 연봉 1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8450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유 후보자가 회사지분만큼 운영에 따른 매출소득도 별도로 받아 법무법인에서 5년간 벌어들인 연평균 소득은 1억887만원으로 2013년 한 해에만 1억8942만원을 벌었다"며 "국회의원 수입까지 포함하면 같은 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비록 과거에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억대 소득을 받으며 국회의원을 겸직해 온 것은 국민 감정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